

#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 (1994. 4~6)

1994. 6. 30

남궁영(북한연구실 연구위원)

정영태(북한연구실 연구위원)

김성철(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허문영(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 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 目次

|   |    |
|---|----|
| I. 概況 .....                                   | 1  |
| II. 對南誹謗 持續과 民族大會 開催 提議 .....                 | 2  |
| 1. 概觀 .....                                   | 2  |
| 2. 經過 .....                                   | 3  |
| 가. 對南誹謗 持續 .....                              | 3  |
| 나. 「8.15 민족대회」開催 提議 .....                     | 4  |
| 3. 分析 및 展望 .....                              | 5  |
| III. 北韓의 IAEA 脫退宣言과 美·北韓 3段階 高位級會談 開催合意 ..... | 8  |
| 1. 概觀 .....                                   | 8  |
| 2. 經過 .....                                   | 8  |
| 가. 北韓의 追加査察 受容과 영변 5MW 원자로 核燃料棒 交替 強行 ..      | 8  |
| 나. IAEA의 對北制裁 決議案 採擇 및 北韓의 IAEA 脫退宣言 .....    | 12 |
| 다. 北韓의 核束結 約束과 美·北韓 3段階高位級會談 開催 .....         | 14 |
| 3. 分析 및 展望 .....                              | 16 |
| IV. 南北頂上會談 提議 .....                           | 18 |
| 1. 概觀 .....                                   | 18 |
| 2. 背景 및 意圖分析 .....                            | 19 |
| 3. 展望 .....                                   | 21 |

|                                     |    |
|-------------------------------------|----|
| V. 南北經濟交流 .....                     | 24 |
| 1. 概觀 .....                         | 24 |
| 2. 經過 .....                         | 25 |
| 가. 3月 動向 .....                      | 25 |
| 나. 4月 動向 .....                      | 26 |
| 다. 5月 動向 .....                      | 27 |
| 3. 分析 .....                         | 28 |
| 4. 展望 .....                         | 29 |
| VI. 朝總聯 動向 .....                    | 32 |
| 1. 概觀 .....                         | 32 |
| 2. 組織變化 및 次世代 組織強化 政策 .....         | 33 |
| 3. 思想事業 및 北韓政策 支持活動 .....           | 34 |
| 4. 金日成 生日行事 .....                   | 35 |
| 5. 日本內 反朝總聯 雰圍氣와 朝總聯 및 北韓의 對應 ..... | 36 |
| 가. 朝總聯本部 搜索 및 反朝總聯 모임 .....         | 36 |
| 나. 朝總聯과 北韓의 對應 .....                | 37 |
| 6. 日本銀行의 달러 送金規制 .....              | 39 |
| 7. 展望 .....                         | 40 |

## I. 概況

- 1994년 2/4분기 북한은 對南誹謗을 지속하는 동시에, 김일성의 「10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민족대회」를 새로이 제안하였으나, 남북관계 개선의 징후를 표명하지 않고, 북한이 5MW 원자로 핵연료봉 교체를 강행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파국상황까지 물고가는 양상을 보였음.
- 그러나 북한의 IAEA 탈퇴선언으로 유엔 안보리가 對北制裁 결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은 核凍結이라는 宥和策을 제시, 제3단계 미·북한 고위급회담 개최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94.6.15~18간 방북하였던 지미 카터 前 美대통령을 통해서 南北頂上會談을 제의함으로써 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음.
- 한편 남북경제교류와 관련, 1994년 2/4분기 南北交易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와 대비하여 交易規模 및 搬出 증가, 賃加工交易의 급증이라는 특징을 보였으며, 조총련의 전반적인 활동은 일본 경찰의 오사카 및 교토본부 수색과 일본내 확산되고 있는 反朝總聯 움직임에 따라 상당히 위축되고, 組織과 凝集性 측면에서도 최근들어 弱化되고 있음.

## II. 對南誹謗 持續과 民族大會 開催 提議

### 1. 概觀

- 1994년 2/4분기 북한은 「김영삼 정부 타도」를 선전·선동하는 對南 誹謗을 지속하는 동시에, 김일성의 「10대 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방도로서 「민족대회」를 새로이 제안하였음.
- 對南誹謗에 있어 북한은 남한의 주요 사건일인 4.19, 5.18 등에 즈음하여 反政府·反美 鬭爭을 격렬하게 선전·선동하는 한편, 남한정부의 정책에 대한 날조(「화폐개혁설」 등)와 비난(러시아 벌목공 귀순조치, 불법 폭력시위 사법처리 방침 등)을 통하여 내부 혼란을 기도하였음.
- 한편 북한은 「서울 불바다」 발언을 변명하는 대신, 「10대 강령」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과거 「정치협상회의」와 같은 「민족대회」를 제의함으로써 統一戰線戰術에 근거한 「합작통일」을 기도하였음.
  - 統一戰線戰術과 관련, 북한은 문익환목사 백일제 추모 행사 참가가 무산되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명의로 규탄성명을 발표(4.26)하는 한편, 비전향 장기복역수 김인서·함세환의 송환을 계속 요구함.

## 2. 經過

### 가. 對南誹謗 持續

- 북한은 「4.19 혁명」 34주년과 「5.18 광주 민주화운동」 14주년을 계기로 反美·反政府 연대투쟁을 선동하였음.
  - 북한은 우리 정부를 「외세의존적·사대매국적 예속정권·반민족적 대결정권·파쇼정권」, 「가짜 문민 파쇼독재 정부」로 규정한 후,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반미 자주화 투쟁」에 결부해야 할 것임을 주장함.
  - 또한 북한은 「4.19 평양시 기념보고회」, 「5.18 평양시 군중대회」 등을 통해 「국가보안법의 철폐와 파쇼 폭압기구의 해체와 정치범 석방 및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 투쟁할 것을 선동함.
  
- 북한은 남한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난을 가하는 한편, 나아가 날조된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남한의 내부 분열과 혼란을 기도하였음.
  - 「평화협상」관련 한국태도 비난 (5.6)
  - 러시아 별목공 귀순 허용조치 비난 (5.12)
  - 김영삼 대통령의 「노사화합」 당부를 비난 (5.24)
  - 이홍구 통일부총리의 「비핵화선언」 무효화 발언 비난 (5.25, 28, 30)
  - 「화폐개혁설」 날조 유포 (6.4)

-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사법적 처리방침에 대한 비난 (6.23) 등

#### 나. 「8.15 민족대회」 開催 提議

○ 북한은 4.1 개최된 「10대강령」 1주년 기념 「정치인·학자·언론인 연구토론회」에서 “김정일을 조국통일의 구심점”으로 하여, “김정일의 영도에 따른 90년대 통일실현”을 강조한 이후, 4.11 「10대강령」을 철저히 관철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공화국 정부·정당·사회단체 연합회의를 개최하여 全民族의 大團結 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민족대회」 소집을 제의함.

- 性格: 조국광복 50돌을 한해 앞둔 8.15를 계기로 평양이나 서울에서 全民族의 大團結 방도를 모색하기 위한 대회

- 代表資格: 남과 북의 당국, 정당사회단체 및 해외동포

- 議題: 민족대단결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과 통일을 앞당기는데 필수적인 민족공동의 과제 및 관심현안 논의

- 準備委員會: 남과 북, 해외에서 각 5명의 대표로 구성하여 5월 중순경 평양이나 서울에서 제 1차회의

- 前提條件: 남한당국은 핵전쟁연습 중지 및 국제공조체제 포기함으로써 민족대회 소집에 유리한 분위기 조성 촉구1)

○ 북한은 남한 정부 및 사회가 「민족대회」 소집에 호응하는 움직임

---

1) 북한은 1993.4.8 「10대 강령」 발표시에도 ①외세의존정책 포기, ②남조선에서 미군철수 의지 표명, ③외국군대와 합동군사훈련 영구중지, ④미국의 핵우산 포기 등 4개 대남 요구사항을 제시한 바 있음.

을 보이지 않자, 일련의 담화를 통해 「준비접촉」 소집을 촉구하였음.

-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민족대회소집 제안 호응 촉구 (4.22)
- 조평통 서기국, 통일원에 「민족대회」 소집실현 촉구 및 북측대표 선출 내용 電通 (5.25)
- 「사민당」 부위원장 김영호 담화 (5.31)
- 천도교 청우당 위원장 유미영 담화 (6.1)
- 「조국전선」 서기국장 유호준 담화 (6.2)
- 「직총」 위원장 주성일 담화 (6.3)

### 3. 分析 및 展望

- 북한이 남한정부가 정통성을 지닌 문민정부임에도 불구하고,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후 「정권타도」를 적극 선동하고 있는 것은 북한 주민에게 反韓·反美意識을 고취함으로써 對內 統合을 도모하는 동시에, 「한총련」 중심의 학생시위를 겨냥, 남한 학생들에게 反政府·反美鬭爭을 고무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남한 문민정부가 「4.19」를 「혁명」으로 규정한 후, 그 계승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4.19」를 「인민봉기」로 개칭한 후, 「반미 구국항쟁」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편 북한이 제의한 「민족대회」는 과거 북한이 제기했던 「정치협상회의」, 「연석회의」 등과 유사한 내용과 형식의 집회로 북한은 이를 통해 핵문제와 관련된 國際的 制裁壓力과 극심한 경제난 등 體制 不安感을 對南攻勢로 전이시키는 한편, 남한 내부의 조계종 분규의 정치쟁점화, UR 의정서 조인 및 국회 인준에 따른 여야 대립, 한총련 시위 등에 편승하여 정국 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의도에서 제기된 것으로 분석됨.
  - 결국 「민족대회」는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 곤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연례적으로 벌이는 상투적이고 진부한 統一戰線戰術의 하나에 불과함.
  - 북한이 「민족대회」를 집요하게 추진하는 것은 남한에서 한총련 출범식 (5.27~29), 6~7월 노사분규, 8월 범민족대회 등을 계기로 남한 사회의 혼란을 유도하는 동시에, 「남북화해와 단합」을 강조함으로써 對北制裁가 단행될 경우에 대비한 二重戰略에 기인하는 것임.
  
- 북한은 7.25 남북정상회담 개최시까지 對南誹謗을 다소 줄일 것으로 전망되나, 對南誹謗과 「민족대회」와 같은 統一戰線事業을 근본적으로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의도대로 전개될 경우, 다소 신축적인 자세로서 대남비방과 통일전선 사업을 추진할 것임.
  - 반면에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하나의 조선론」에 근거하여 해석함으로써 북한체제의 內部結束을 강화하는 동시에, 對南誹謗과 이에 따른 남한내부 분열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으로 전망됨.

### Ⅲ. 北韓의 IAEA 脫退宣言과 美·北韓 3段階 高位級會談 開催合意

#### 1. 概觀

- 북한은 IAEA의 추가사찰 압력에 직면하여 이를 계속 거부해 오다가 결국 수용(4.19)하였으나, 5MW 원자로의 핵연료봉 교체를 강행(5.17)함으로써 또다시 國際的 制裁·對峙局面을 야기하였음.
  - IAEA 이사회는 북한이 교체될 핵연료봉에 대한 샘플채취를 통한 사찰활동을 거부하고 핵연료봉 교체작업을 일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6.10 對北制裁 決議案을 채택함.
  
- 이에 대응하여 북한은 IAEA 탈퇴를 선언(6.13)하였으며, 이에 따라 유엔안보리는 對北制裁 決議案 채택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추진하기 시작하였음. 이러한 시점에서 북한은 核凍結 약속이라는 宥和策을 제시하여 미국으로부터 7.8부터 제3단계 美·北韓高位級會談 개최 합의(6.23)를 유도해 내었음.

#### 2. 經過

가. 北韓의 追加査察 受容과 영변 5MW 원자로 核燃料棒 交替 強行

- 북한 핵시설에 대한 추가사찰을 요구하는 안보리의장 성명이 채택

(1994.3.31)되자 북한은 4.4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상정을 비판함과 동시에 IAEA와 북한간의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을 정상화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음.

- 북한은 “핵문제에서 이중기준이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제하의 「로동신문」 논평(4.13)을 통해 유엔 및 IAEA의 핵문제 관련, “이중적 기준”의 自意的 適用에 대해서 비난하였음.<sup>2)</sup>

- 북한 외교부는 4.20 「외교부 비망록」을 발표, 핵문제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조·미회담에 진지하게 달라 붙는다면 담보협정 이행문제도 자연히 풀릴 것이고 나아가서 핵문제도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함으로써 미·북한 회담 성사에 많은 관심을 표했음.

○ 이에 앞서 4.19 북한은 영변지역의 5MW 원자로의 핵연료봉을 교체할 때 IAEA 사찰단의 입회를 요청한데 이어 IAEA와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사찰 수용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으나, 4.24 IAEA의 키드 대변인은 “영변 원자로의 핵물질 전용여부를 확인

---

2) 북한은 이 논평에서 IAEA는 미국의 보호 아래 위험한 핵 장난질을 하고 있는 나라들(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등)에 대해서는 눈감아 주면서 평화적 핵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부당하게 걸고 들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게 IAEA의 부당한 추가사찰을 받아들일데 대한 의장 성명을 발표한 것은 핵문제에 대한 2중기준정책의 노골적 표현이라 주장하였음.

하기 위해서는 시료채취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북한이 “핵연료봉 시료채취를 허용하지 않으면 IAEA 사찰단을 북한에 보내지 않을 것임”을 밝혔음.

- 북한은 7개 핵시설 중 방사화학실험실을 제외한 6개 핵시설에 대한 감시카메라의 필름 및 배터리 교체 등을 위한 후속 추가 사찰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IAEA에 밝힘.

○ 4.27 북한의 외교부 대변인은 IAEA가 5MW 원자로의 핵연료봉 교체 입회시 시료채취 보장 불허 방침을 다음과 같이 밝힘.

- 기구의 입회활동에는 노심연료 교체활동에 대한 관측, 폐연료봉 계수기에 의한 모든 연료의 측정, 교체된 모든 연료에 대한 기구의 봉쇄와 감시, 기구의 봉인 및 감시 기제와 관련한 활동, 운영 및 회계기록 문건들에 대한 검사 등 담보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충분한 사찰내용이 다 포함 될 수 있음.

- 우리는 최근 북남 특사교환 문제를 둘러싼 정세의 변화에 맞게 미국과 기구 서기국의 차후 동향을 보고 추가사찰 문제도 특별로 허용해 줄 용의가 있다는 데 이미 그들에게 통보해 주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의를 무시하고 이번 노심연료 교체 시료채취요 뭐요 하면서 우리의 특수지위를 무시하는 사찰 활동을 무리하게 요구한다면 그것은 불순한 정치적 기도로 밖에 달리는 볼 수 없을 것임.

- 4.29 IAEA는 북한의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시 샘플채취는 추후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입회사찰을 위한 사찰단을 파견하겠다는 전문을 북측에 보냈으며, 5.13 IAEA 키드 代辦人은 IAEA의 사찰단이 지난 3월 사찰때 완료하지 못했던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추가사찰과 감시 및 봉인장치의 교체유지 작업 수행을 위해 북한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밝힘.
  - 반면 4.29 駐中 북한 대사관 배용재 代理大使는 IAEA 입회와 무관하게 연료봉 교체를 추진한다는 사실을 밝힘.
  
- 북한은 독자적으로 영변 5MW 원자로의 봉인을 제거하고 핵연료봉 교체작업에 들어감과 동시에 IAEA 사찰단은 5.17 오후 북한에 들어가 핵사찰 업무를 개시하였음. 또한 5.21 북한은 5MW 원자로의 연료봉 교체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IAEA 고위급대표단의 방문에 합의했다고 밝혔음.
  
- 5.25 IAEA는 IAEA 사찰단이 북한의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추가사찰 임무는 완료했으나 문제의 5MW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봉의 시료를 채취하지는 못했음을 밝혔음. 또한 IAEA는 핵연료봉 교체와 관련, 북한과의 협상 결렬(5.27)을 밝혔음. 이와 관련, IAEA 사무국은 6.2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북한에 있는 핵안전조치에 관한 사찰단의 보고를 토대로 국제

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수년간 5MW급 원자로로부터 핵연료의 어떠한 전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혀줄’ 추후 계측을 위한 연료봉 선정이 원자로로부터의 사용된 연료봉 인출로 불가능해졌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 북한은 5.28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하여 핵연료봉 교체와 관련한 IAEA와의 협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이번 협상에서 기구측은 먼저 노심연료의 선택 및 분리 보관방법을 제기했으나, 이것은 우리의 특수지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접수될 수 없다는데 대하여 쌍방의 양해가 이룩되었음.
  - 우리는 노심연료 교체작업에 적용되고 있는 방법이 현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데 대하여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기구측의 의견들을 수용하는 방향에서 노심연료 교체작업을 계속하며 기구측의 사후협상제외에 언제든지 응하겠다는 것을 담보하였음.

#### 나. IAEA의 對北制裁 決議案 採擇 및 北韓의 IAEA 脫退宣言

- IAEA가 유엔제출 보고서(6.2)에서 “북한이 과거 핵연료를 전용했는지 여부를 밝혀줄 추후계측을 위한 핵연료봉 선별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이후 한·미 양국을 위시하여 UN, IAEA 등 국

제기구들은 핵문제 관련, 對北制裁 움직임을 본격화 하기 시작했다.

- 북한 원자력 총국장 박용남은 6.7 한스 블릭스 IAEA 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발송, “현재 진행중인 영변 5MW 원자로 연료봉 교체 방식으로도 과거핵물질 전용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국제사회의 對北制裁가 취해질 경우 이에 대해서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기구 서기국이 서둘러 노심연료의 차후 측정을 위한 기술적 가능성이 깨졌다고 결론을 내리고 유엔에 끌고가 압력 일면에 매어달린다면 우리는 기구 서기국의 부당한 구속을 받을 필요를 더는 느끼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북한은 “부득불 평화적 핵활동의 다음 공정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음”을 밝힘.
  
- IAEA는 6.10 개최된 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연 50만-60만 달러의 기술원조를 중단하고 특별사찰 수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8, 기권 4, 반대 1로 통과시켰으며, 이에 대해 북한은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IAEA 탈퇴를 선언함(6.13).
  - 북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의 요지는 첫째, 국제원자력 기구로 부터 즉시 탈퇴함.
  - 둘째, 우리의 특수지위하에서 받아오던 담보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찰을 더이상 지금처럼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함.

- 셋째, 우리가 핵무기전파조약에 복귀하는가 완전히 탈퇴하는가가 판가름날 때까지 그 어떤 부당한 사찰도 절대로 허용될 수 없음.
  - 넷째, 유엔제재는 곧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재확인함.
- 북한의 IAEA 탈퇴선언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대북 무기금수, 각종 원조 중지, 교류제한 등을 내용으로 한 決議案을 준비하는 등 對北制裁 움직임을 가속화함으로써 한반도에 있어서 새로운 긴장과 대치 국면이 조성되었음.

#### 다. 北韓의 核凍結 約束과 美·北韓 3段階高位級會談 開催

- 북한 핵문제 관련,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시점에서 방북 중인 카터 前 美대통령과 2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 북한측은 미·북한 3단계회담 개최가 보장되면 핵개발을 동결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음.
  - 북한이 현재의 흑연 감속형 원자로를 경수로 원자로로 전환하는 데 대한 미국의 지원 요청
  - 북한을 핵공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에 대한 요구

- 미국은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 차관보 명의의 북한 외교부의 강석주 부부장 앞으로 보낸 서한(4.20)을 통해 북한측이 영변 원자로에서 인출된 연료봉 재처리 금지, 연료봉 재장착 금지 및 국제원자력기구 사찰요원의 북한체류와 감시장비 유지를 허용한다는 조건으로 미·북한 3단계고위급회담 개최 및 유엔제재 추진 중단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강석주 외교부 부부장은 미국측에 보낸 서한(6.22)에서 회담 기간 중 영변 5MW 원자로에 새로운 연료봉을 장전치 않을 것, 인출 연료봉을 재처리 하지 않을 것, IAEA 사찰팀을 잔류시킬 것 등을 공식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미·북한 3단계 고위급 회담이 성사되었다.
  - 그러나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6.25 “일부 세력들이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자주권에 대한 침해로 되는 군사대상 사찰을 강요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들에게도 이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후과를 생산시키게 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미·북한 3단계고위급회담에서의 특별사찰 문제 제기를 사전 차단하고 있음.
-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6.23 조선중앙통신 기자회견을 통해 최종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3단계회담을 7월 첫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을 밝혔음. 이어서 북한 외교부 대변인은 미·북한회담 관련 다

음과 같은 보도를 발표(6.27)했음.

- (미·북한) 쌍방은 제 3단계 조·미 회담을 7.8 제네바에서 시작하기로 합의
- 회담은 제네바에 있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표부와 미합중국 대표부에서 진행
- 회담에서는 일괄타결방식으로 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을 비롯해서 조·미 사이의 현안문제들이 토의될 것으로 예견

### 3. 分析 및 展望

- 북한은 핵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단계적이고도 점진적인, 그러나 그들의 완전한 核武裝 淸算와는 거리가 먼 양보만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치·경제·군사상의 이득을 미국으로부터 도출해 내고자 적극 노력해 온 것으로 판단됨.
- 핵문제와 관련하여 이러한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북한은 NPT 탈퇴선언, 5MW 원자로의 핵연료봉 교체 강행 및 IAEA 탈퇴선언 등 몇차례의 極端政策을 구사해 왔음.
- 이러한 북한의 극단적 태도는 對美 核協商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관철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함.

- 첫째, 핵해결의 수순을 가능한한 지연시킴으로써 핵개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고(最小限의 核武裝 옵션 不拋棄)
  - 둘째, 미국과의 직접적인 협상을 활성화하여 양국간의 관계폭을 확장함과 동시에 미군철수로 귀결될 수 있는 평화협정체제 요구를 기반으로한 韓·美 同盟關係 弱化를 도모함.
- 결국 북한은 핵동결의 조건으로 미국과의 제3단계고위급회담을 유도하여 上記 두가지 목적을 관철시켜 나가고자 함.
- 북한의 핵동결 약속은 그들의 핵개발 과거사는 불문에 부치고 향후의 지속적인 개발을 금하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임.
  - 북한의 향후 핵개발 억제를 위한 조건은 기인출한 사용후 핵연료봉 재처리 금지, 5MW 원자로 새연료 장착 금지, IAEA의 핵안전조치 이행 등임.
  - 북한의 이러한 핵동결 제안은 기개발된 핵능력을 보유하면서 단지 현재, 미래의 핵개발 추진 유무를 새로운 핵카드로 활용함으로써 미·북한 관계정상화 의제를 포함한 政治協商을 미국과 계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임.

## IV. 南北頂上會談 提議

### 1. 概觀

-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94.6.15~18간 방북하였던 지미 카터 前 美 대통령을 통해서 南北頂上會談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6.20 한국 정부는 이를 즉각 수락함과 동시에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副總理級 예비접촉을 6.28 개최할 것을 제의하였고, 6.22 북한이 이를 수락하였음. 이에 따라 6.28 개최된 예비접촉에서 남북한은 정상회담 개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合意하였음.
  - 7.25~27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 개최
  - 체류일정은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 다음 회담은 1차 회담시 쌍방 頂上의 뜻에 따라 결정
  - 쌍방은 남북정상회담 분위기를 좋게하기 위해 노력
  
- 이러한 북한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및 合意는 북한의 5MW 원자로 핵연료봉 교체 강행에 따른 IAEA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6.10) 및 이에 반발한 북한의 IAEA 탈퇴선언(6.13)으로 유엔 안보리가 對北制裁 결의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북한이 核凍結이라는 宥和策을 제의하자 미국이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임.

## 2. 背景 및 意圖分析

- 북한은 심각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침체에서 기인한 社會的 不安定 狀態의 탈피를 통한 체제유지를 위하여 核透明性을 제공하여 국제적 제재를 모면함과 동시에 對南關係와 미·일 등 對西方關係를 개선시킬 필요성에 직면한 것이 사실임.
  - 김일성 주석의 금번 정상회담 제의는 南北頂上會談을 통하여 對南關係를 개선시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이를 근간으로 對西方 關係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肯定的 意圖의 일면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북한은 이제까지 IAEA·미국의 北核施設 사찰 요구를 전면 수용하여 核透明性을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美·일을 비롯한 대서방 및 대남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및 원조를 유인할 수도 있었으나, 核透明性 보장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적 고립과 제재위협을 감수해 온 것은 核戰略과 관련한 二重目的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북한 핵전략의 이중목적은 「最小限의 核 옵션(과거 핵) 不拋棄」와 부분적 양보 차원(현재, 미래 핵개발 동결)의 「核카드 활용」으로 대미 관계개선 및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을 포함한 政治協商을 성사시켜 나가는 것임.
  - 이는 「최소한의 核 옵션」이 보장되지 않는 한 북한이 對美協商을 통하여 긍정적인 방향으로 對內外的 政策轉換을 시도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제의 등과 같은 對南 宥和的 姿勢를 취하게 된 것은 二重目的을 가진 核戰略 관철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기인된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됨.
  -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유엔 안보리의 對北制裁, 북한의 강경대응으로 사태가 급작스레 악화되던 최근까지의 北核狀況이 협상 분위기로 反轉된 것은 북한의 완전한 핵투명성 제공 차원에서 기인된 것이라기 보다 核戰略과 관련한 이중목적 관철을 가능케 할 수도 있는 북한의 核凍結 제안이 미국에 의해 전향적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임.
  - 미국은 핵사찰과 관련한 북한의 들출행동에 대한 응징조치로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조치를 모색해왔으나, 중국·러시아의 미온적인 태도로 인하여 制裁의 實現性조차 의심되는 상황에 봉착하였음.
  - 결국 이러한 상황은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과거 핵문제에 대해서는 단계적 협상을 모색하면서 현재 및 미래의 核凍結 약속을 받아내는 식으로 制裁局面에서 協商局面으로 선회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판단됨.
  
- 만약 미 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核凍結 약속 차원에서의 對美 政治協商에 성공할 경우, 핵문제로 인한 부담에서 어느

정도 탈피함과 동시에 美·日을 포함한 대서방 및 대남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북한은 이를 기반으로 대외적 경제원조 및 협력을 誘引하여 부분적 개방노력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을 것임.
-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추구하는 局面轉換의 의도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同 회담에서 북한이 對美 政治協商에 실패할 경우 핵문제로 인한 국제적 압력이 지속되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은 심화될 것이며, 이는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국면전환의 의도가 실현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할 것임.

### 3. 展望

-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판단할 때 북한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는 美·北韓間 核協商의 진전에 따라 그 성사 여부와 실질적 성과가 결정될 것임.
  - 核凍結 조건 준수 여부는 향후 미·북한간 핵협상의 진전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임.
- 결국 북한은 核凍結을 조건으로 對美 관계개선을 비롯한 政治協商을 진행시킬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이 핵동결 차원을 넘어

서는 요구를 協商議題로 제기할 경우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의 성공여부는 불투명하게 될 것이며, 이는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즉 미국이 북한핵의 현재·미래의 핵투명성 보장요구 차원에서 가 아니라, 영변의 두개 핵의혹 시설에 대한 「特別査察」을 포함한 북한핵의 「과거」 투명성 보장요구에 초점을 맞출 경우 제 3단계회담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김일성 주석은 핵문제와 관련한 미·북한 3단계 고위급회담에서 타결을 보게될 정치적 의제와 관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정치적 결단」을 유도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북한의 核凍結 약속, 美·北韓 關係改善 및 平和協定 체결 등을 포함한 의제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미·북한 고위급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북한에 있어서는 남북정상회담 개최의 중요성이 그만큼 반감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북한핵 관련 미국의 태도가 힘을 사용하는 強硬策 선호입장에서 協商을 통한 해결책에 비중을 둔 방향으로의 旋回가 감지되고 있는 만큼 북한핵의 「과거」 핵투명성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한다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현재 및 미래의 핵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북한과 관계개선을 포함한 포괄적 의제를 논의하는 政治協商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남북정상회담의 개최는 이의 並行的 차원에서 성사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미·북한 협상의 진전으로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정치·군사적 양보를 도출해 낼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경우 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까지도 예상할 수 있음.

## V. 南北經濟交流

### 1. 概觀

- 1988.10 남북경제교류가 시작된 이후 1994.5까지 반출입 승인총액은 7억 3,271만 달러이며, 그중 반입이 6억 6,977만 달러, 반출이 6,294만 달러임.
  - 남북한 交易承認規模는 1988년의 104만 달러에서 1991년 1억 9,217만 달러, 1992년 2억 1,350달러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1993년에는 1억 9,879만 달러로 감소하였음.
- 1994년들어 5월까지의 남북교역 승인실적은 반입 7,094만 달러, 반출 889만 달러, 도합 7,892만 달러를 기록, 작년 동기간 대비 2.7% 증가하였음.
  - 4월까지의 通關實績은 작년 동기간 대비 2.3% 증가한 5,910만 달러로서 반입 5,427만 달러, 반출 483만 달러임.
- 한편 1994년 들어 5월까지의 委託加工交易 승인실적은 반입금액 기준으로 42건, 962만 1천 달러를 기록, 1993년 총위탁가공교역 승인실적인 438만 5천 달러를 2.2배 초과하였음.

<표 1> 연도별 반출입 승인현황(1988.10~1994.5)

| 연 도  | 반 입   |          | 반 출  |         | 계     |          |
|------|-------|----------|------|---------|-------|----------|
|      | 건 수   | 금액(천\$)  | 건 수  | 금액(천\$) | 건 수   | 금액(천\$)  |
| 1988 | 4     | 1,037    | -    | -       | 4     | 1,037    |
| 1989 | 57    | 22,235   | 1    | 69      | 58    | 22,304   |
| 1990 | 75    | 20,354   | 4    | 4,731   | 79    | 25,085   |
| 1990 | 328   | 165,996  | 40   | 26,176  | 368   | 192,172  |
| 1992 | 365   | 200,685  | 42   | 12,818  | 407   | 213,503  |
| 1993 | 478   | 188,528  | 76   | 10,262  | 554   | 198,790  |
| 1994 | 216   | 70,938   | 46   | 8,885   | 262   | 79,823   |
| 1~5월 | (171) | (75,175) | (30) | (2,559) | (201) | (77,734) |
| 총 계  | 1,523 | 669,773  | 209  | 62,941  | 1,732 | 732,714  |

주: ( )내는 1993년 동기실적

## 2. 經過

### 가. 3月 動向

- 3월 중 남북교역 승인실적은 68건, 2,128만 8천 달러이며, 이중 반입승인은 55건 1,949만 4천 달러, 반출승인은 13건 179만 4천 달러임.

- 반입품목은 철강금속류가 71.0%(1,383만 8천 달러)로 주종을 이루었으며, 농·임산물이 15.7%, 섬유류 11.6%이며, 반출품목은 위탁가공원부자재인 섬유류가 98만 4천 달러로 54.8%를 차지하였음.
- 통관실적은 반입 57건 1,863만 6천 달러, 반출 2건 65만 4천 달러로서 합계 59건 1,920만 달러임.
- 위탁가공교역 승인실적은 12건 134만 3천 달러(반입승인액 기준)로 지난달 9건 97만 달러에 비해 38.5% 증가하였으며, 전년 동기 3건 6만 7천 달러에 비해 20배 증가하였음.<sup>3)</sup>

#### 나. 4月 動向

- 4월 중 남북교역 승인실적은 44건 1,604만 달러이며, 이중 반입승인은 37건 1,372만 7천 달러, 반출승인은 7건 231만 3천 달러임.
- 반입품목은 금괴, 아연괴 등 철강금속류가 844만 8천 달러로 61.6%, 섬유류 24.3%였으며, 반출품목은 거의 모두가 위탁가공원부자재였음.

---

3) 委託加工交易은 반출과 반입이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따르기 때문에 거래 당사자간에 위탁가공으로 계약은 체결하지만, 실제 거래는 반출과 반입을 분리하여 독립된 決済方式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많음.

- 4월 중 통관실적은 69건 1,669만 5천 달러로서 반입은 54건 1484만 2천 달러, 반출은 15건 185만 3천 달러임.
- 위탁가공교역 반입승인실적은 7건 310만 1천 달러로서 전년동기(5건 26만 1천 달러)에 비해 약 12배 증가하였음.
  - 품목은 추동복인 바지, 코트, 오리털잠바, 자켓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다. 5월 動向

- 5월 중 남북교역 승인실적은 36건 1,255만 1천달러로서 이중 반입승인은 28건 1,088만 2천달러, 반출승인은 8건 166만 9천 달러임.
- 반입품목은 철강금속류가 여전히 주종으로서 66.8%, 섬유류 24.1%, 농·임산물 5.3%이며, 반출품목은 전부가 위탁가공 원부자재인 섬유류임.
- 5월 중 위탁가공교역실적은 8건 239만 8천 달러를 기록, 전년동기 8건 69만 2천 달러에 비해 3.5배 증가하였음.

### 3. 分析

- 1994년의 南北交易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북한대표의 ‘불바다 발언’에도 불구하고 전년동기와 대비하여 ①交易規模 증가, ②搬出 증가, ③賃加工交易의 급증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交易規模와 관련, 1994년 들어 5월까지의 남북교역실적은 搬入이 전년동기에 비해 5.6% 감소한 반면, 搬出이 350%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7% 증가하였음.
  - 통관실적(4월까지)도 반입실적은 5,427만 달러로 전년동기 5,648만 달러의 96.5%로 비슷한 수준임에 반하여, 반출실적이 전년동기의 128만 달러에서 483만 달러로 4배 가까이 급증하여 전년동기에 비하여 2.3% 증가하였음.
- 그간의 남북교역은 대부분 반입위주로 이루어졌으나, 1994년에 들어 반입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하여 반출은 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바, 이는 위탁가공교역을 위한 원부자재의 반출이 증가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1993년 남북교역 중 반출비중은 승인기준으로 5.2%, 통관기준으로 4.5%에 불과하였으나, 1994년 들어 5월까지의 반입비중은 승인기준 11.2%, 통관기준 8.2%로 증가하였음.

- 한편 남북교역은 賃加工交易의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
  - 1994년들어 5월까지의 위탁가공교역 승인실적은 962만 달러(반입기준)로서 남북간에 위탁가공교역이 시작된 1991년이후 1993년말까지의 총 위탁가공교역 승인 실적(496만달러)의 약 2배임.
  - 이와 같은 위탁가공교역의 대부분은 의류·봉제분야에 집중되어 있는 바, 이는 북한이 새로운 經濟戰略으로 강조하고 있는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음.

#### 4. 展望

- 남북교역은 현재 북한 핵문제에도 불구하고 交易規模 및 賃加工交易<sup>4)</sup>의 증가추세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북한 핵문제 해결 및 남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남북교역은 임가공교역분야의 급신장으로 전체 交易規模도 증대하여 남북교역이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sup>5)</sup>
- 특히 북한으로서는 한국과 임가공교역으로 노동력을 활용하여 생

---

4) 위탁가공무역은 국가간에 가공할 원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자에게 공급하고 이를 가공후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거래를 일컫으며, 加工賃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가공무역이라고 불리기도 함.

5) 남북한 교역(통관기준)이 북한의 총무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6.5%에서 1993년에는 7.1%로 증가하였음.

산설비를 획득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輸出型産業을 발전시켜 外貨를 벌어들일 수 있으므로 임가공교역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 특히 외화부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남북교역의 확대는 북한으로서 현재의 經濟危機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다만 임가공생산을 하는 기업이 주문된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갖추고 있을 경우, 처음부터 임가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생산설비와 기술이 미비되어 있으면 임가공 실시전에 生産條件을 갖추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므로 남북간 임가공교역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할 것임.<sup>6)</sup>

---

6) 생산주문을 하는 위탁기업이 필요한 설비와 기술 등을 제공하여 상대기업과 함께 새로운 합작(Joint Venture)공장을 설립하는 방안과 합작공장을 설립하지 않고 생산설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 상환을 임가공비로 대체하는 방안이 있는 바, 현재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전자는 「합영」이 되고 후자는 「합작」이 됨.

<표 2> 위탁가공교역 승인현황

(단위: \$)

| 년 도     | 건 수 | 반 입        | 반 출        |
|---------|-----|------------|------------|
| 1991    | 1   | 22,880     | 13,406     |
| 1992    | 10  | 556,076    | 413,635    |
| 1993    | 44  | 4,384,634  | 3,610,788  |
| 소 계     | 55  | 4,963,590  | 4,037,829  |
| 1994. 1 | 6   | 1,809,747  | 996,412    |
| 2       | 9   | 970,080    | 511,336    |
| 3       | 12  | 1,342,520  | 984,789    |
| 4       | 7   | 3,100,467  | 2,312,576  |
| 5       | 8   | 2,398,313  | 1,669,684  |
| 소 계     | 42  | 9,621,127  | 6,474,797  |
| 총 계     | 97  | 14,584,717 | 10,512,626 |

## VI. 朝總聯 動向

### 1. 概觀

- 2/4 분기 조총련의 전반적인 활동은 일본 경찰의 오사카 및 교토 본부 수색과 일본내 확산되고 있는 反朝總聯 움직임에 대한 對應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특징을 보였음.
  - 일본 정부는 조총련의 불법활동에 대해 예전에 없던 강경한 조치를 취한 바, 이는 핵문제와 관련 일본내 대북한 및 대조총련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 한편 조총련은 일련의 사태를 단합의 계기로 삼고자하는 동시에 民團側과의 연대강화를 더욱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조총련은 組織과 凝集性 측면에서 최근들어 弱化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이를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징후들이 있음.
  - 현 지도부내의 허종만과 이진규의 갈등은 기존 서열의 무시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조직의 자율성이 더욱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줌.
  - 조총련은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 일체감 상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바, 이는 차세대의 民族結婚을 최대의 과제로 간주하는데서 입증됨.

## 2. 組織變化 및 次世代 組織強化 政策

- 韓德銖 조총련 의장이 요양 명목으로 4.26 入北함에 따라<sup>7)</sup> 조총련은 사실상 許宗萬<sup>8)</sup> 책임부의장의 지도체제로 넘어가게 되었으나, 허종만은 李珍珪 제1부 의장과 갈등관계에 있어 그의 지도체제는 아직 불안정한 상태임.
  - 이진규의 지지세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 조총련은 양분될 수도 있음.
- 또한 조총련은 民族結婚이 조총련의 장래를 결정할 가장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동포결혼상담 중앙센터」를 개설하고, 지방별로 상담소를 설치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조총련은 지난 3.23-3.24 도쿄에서 「청춘의 상봉 94」를 열어 남

---

7) 한덕수의 入北 經緯에 대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가지 해석이 있음. 하나는 그의 입북 날짜가 일본 경찰의 오사카본부 강제수색이 있었던 4. 25의 다음날이라는 점에서 북한측이 조총련의 대북 송금비밀 등을 지키기 위해 그를 송환했을 것이라는 분석이고, 다른 하나는 평소 북한측과 한의장 간의 갈등때문에 북한측이 그를 평양에 체류시키고 충성스러운 허종만에게 지도권을 넘기게 하려는 의도였다는 해석임. 한덕수는 6.7 김일성을 접견하였음.

8) 허종만은 1931년 慶南 固城 출생으로 조총련 결성시부터 활동하여 청년동맹 조직부장, 국제국 부장 및 국장을 거쳐 재정경제담당 부의장을 역임함. 그는 7명의 부의장 중에서 서열이 가장 낮았지만, 재정경제담당을 맡아 對北韓 送金에 능력을 발휘하면서 金正日의 신임을 받게 되었음.

25세 이상, 여 23세 이상 미혼자들의 만남의 기회를 마련한 바 있음.

### 3. 思想事業 및 北韓政策 支持活動

- 조총련은 2/4 분기 동안에도 사상사업 및 북한정책 지지활동의 일환으로 「10대강령」 관철 모임을 계속 전개함.
  - 「조선중앙방송」(4.17)에 따르면, 조총련은 효고현, 홋카이도, 교토, 오사카, 가나가와현 등에서 모임을 갖고 서명운동까지 전개함.
  
- 조총련은 연초에 금년을 「김정일 위대성 교양의 해」로 설정하였는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산하 각급 기관과 단체별로 「김정일사상 연구토론회」를 구성하고, 김정일에의 변함없는 충성과 사상무장을 독려하고 있음.
  - 특히 6.15 조총련 도쿄본부에서 중앙상임위 부의장 배병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토론회가 개최된 이후 기관 및 단체별 토론회가 확산됨.
  
- 조총련은 또한 金正日 黨事業 시작 30주년(6.19)을 맞아 충성을 다짐하는 축하문을 발송했는데, 여기서 김정일을 “조총련 조직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이며 생명”이라고 묘사함.

- 한편 조총련은 南韓政策에 대한 비판과 남한내 운동권 지지활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음.
  - 김영삼대통령이 일본 방문시 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체제 강화 주장과 관련, 배병두 조총련 중앙상임위 부의장은 「반민족 범죄행위」라고 비난함(4.12).
  - 박구호 재일본 조선청년동맹 위원장, 전세권 재일본 조선유학생 동맹 위원장은 담화를 발표(4.17)하고, 韓總聯 2기 대의원회의(4.3)의 미국의 전쟁책동 봉쇄 및 농산물시장 개방반대 결의를 지지함.
  
- 그러나 조총련이 2/4 분기 사상사업 및 북한정책 지지활동은 최근 일본내 反朝總聯 움직임에 대한 규탄대회로 연초보다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중앙통신」(4.14)에 의하면 북한은 對朝總聯 支援事業의 하나인 교육원조비 및 장학금으로 1억4백80만엔을 송금하였음.

#### 4. 金日成 生日行事

- 조총련은 김일성의 82회 생일을 맞아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총련 중앙상임위 경축연회(4.13)와 중앙대회(4.14)를 개최하여 축제 분위기를 고취시킴.

- 경축연회에는 허종만 책임부의장 등 총련 간부외에도 무라야마 도미이찌 社會黨 委員長(현재 일본총리)을 비롯한 일본 정계 인사들이 다수 참여함.

## 5. 日本內 反朝總聯 雰圍氣와 朝總聯 및 北韓의 對應

### 가. 朝總聯本部 搜索 및 反朝總聯 모임

- 일본인들이 잇따라 조총련 계열 고등중학교 여학생을 폭행한데 이어, 「대일본애국자동맹」 구성원이 도쿄의 조선회관, 동해상사, 조선은행 앞에서 일본내 朝總聯 逐出과 북한의 對日 核威脅中止 등을 요구하는 시위(4.19)를 벌임.
- 「북한 민중을 돕는 긴급행동 네트워크 (RENK)<sup>9)</sup> 라는 시민단체가 「북한 정치범 및 북송교포를 돕기 위한 모임」(4.15)에 조총련 오사카본부 관계자 60여명이 난입하여 재일교포 여성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 日本 警察은 진상조사를 위해 4.25 오사카본부 등 8개 건물을 搜索하였음.
  - RENK는 2월 도쿄에서 「북한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을, 그리고 3월에는 나고야에서 「북한 귀국자 및 가족을

9) RENK는 일본의 우익단체로서 북송교포가족들과 연계를 가지고 있어서 조총련은 이를 조직적으로 방해해 왔으며, 그 결과 양 조직은 갈등관계에 있었음.

듣는 모임」을 가진 바 있음.

- 日本 警察은 또한 「국토이용계획법」 위반이라는 명목으로 교토본부와 간부들의 집을 강제수색(6.6)하였으나, 경찰은 곧 위반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수사종결을 발표한 바 있음.

#### 나. 朝總聯과 北韓의 對應

- 朝總聯은 일본내 反朝總聯 사태를 북한 핵문제과 관련하여 일본정부가 배후조정 한 정치적 탄압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각종 호소문과 대대적인 집회를 통해 응수하고 있음.
  - 허종만 책임부의장은 記者會見(4.25)에서 조총련 결성 이후 일본 경찰이 행한 첫 대규모 탄압행위라고 규탄하였으며, 自民黨을 방문(5.3)하여 고노 요헤이 총재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총련 중앙상임위 요청문을 전달함.
  - 조총련 백한기 부의장과 김태희 국제국장은 社會黨本部를 방문(4.25)하여 지지를 호소함.
  - 조총련 敎職員同盟 오사카위원회와 조총련 오사카본부 일꾼들이 각각 긴급회의(4.26)를 가짐.
  - 나카오사카 조선초중급학교에서 3천여명이 참가한 糾彈大會(4.30)는 핵의혹을 구실로한 조총련 탄압을 중지하라고 주장함.
  - 한덕수 조총련 의장은 국제기구와 각국 단체 및 인사에게 조총

련 지지 호소문(5.19)을 보냄.

- 조총련 중앙상임위는 일본 경찰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6.6)을 발표함.
- 조총련 교토본부는 4천5백명이 참가한 대규모 집회(6.10)를 갖고, 6.6 교토본부 수색을 조총련에 대한 조직적 탄압이라고 규탄함.

○ 또한 조총련은 동포들의 단합을 과시하기 위해 「10만호 동포방문 담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특히 民團側과의 連繫를 통해 일련의 사태를 조총련 단독의 문제가 아닌 在日同胞 전체의 문제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음.

○ 한편 北韓은 4.29 조총련과 재일조선동포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하고 사죄하여야 한다는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이래, 언론과 집회를 통해 일본내 反朝聰聯 사태가 北韓 核問題를 둘러싸고 한·미·일 3개국에 북한을 압살하려는 공모라고 주장하고 이를 비난함.

- 「로동신문」 논설(5.14)은 조총련 박해는 북한의 자주권 침해라고 규탄함.
- 특히 교토본부 수색과 관련, 북한은 「로동신문」 논평(6.8)을 통해 對北 적대행위 중단을 요구함.
- 6.9 외교부 성명 “일본당국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

과 총련과 제일동포들에 대한 탄압을 당장 견어치워야 한다”를 발표함.

- 汎靑學聯 北側本部는 조총련 오사카 및 교토본부 수색을 핵문제의 한·미·일 공조체제에 따른 대북한 적대행위라고 비난하는 성명(6.12)을 발표함.
- 북한은 6월 중에 평양 群衆大會를 기점으로 남포, 원산, 개성, 사리원 등지에서 대규모 군중대회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를 비난함.

## 6. 日本銀行의 달러 送金規制

- 북한 「대외무역은행」과 외환거래 계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지방은행인 아시카가(足利)은행은 1월부터 原則적으로 북한으로의 달러 송금업무를 중단했다고 발표(5.20)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객은 은행의 판단에 따라 송금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함.
  - 타 은행들도 4월부터 달러 송금업무를 중단했다고 함.
- 對北 送金業務의 중단은 달러에 국한된 것이며 엔화나 마르크화 송금은 계속되고 있음. 실제 대부분의 송금이 엔화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북송금의 총액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대북 불법송금 혐의로 고베시의 한 무역회사와 관계 거래처를 수사(4.19)함으로써 조총련의 대북송금에 대한 제동을 시사하였음.

## 7. 展望

- 무라야마 내각의 등장, 북·미회담의 재개, 남북정상회담 합의 등의 현 여건을 고려해볼 때, 일본정부의 대조총련 조치 및 일본내 반조총련 여론은 점차 緩和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일본은행의 대북 「달러」 송금중단은 유엔 대북한 경제제재에 대비하는 일본내 움직임으로서, 全般的인 送金規制가 제재수단으로서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이지만 핵문제가 다시 악화될 경우 하나의 정책고려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北韓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화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Ⅳ)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Ⅲ) -
- 93-07 東北亞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保  
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 會議를 契機로 본 亞·太  
地域協力の 展開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對外 개방 現況과 전망-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 核問題에 대한 中國의 立場과 우리의 對中政策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 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第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脫北者 發生 背景 分析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1994. 3. 31)

###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  
(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 〈資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統一條約 批准法律

---

---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 (1994. 4~6)**

統一情勢分析 94-14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7-9288, FAX : 232-5341  
印刷處 오름시스템(주) 전화 : 273-7011  
印刷日 1994년 7월 일  
發行日 1994년 7월 일

---

---